



총선 패배 이후에도 '세월호 지우기', 친기업 정책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변화를 염원하는 대학생들은 메이데이 집회에 참가하자

그동안 박근혜는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 등 친기업적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를 비난하며 국회 심판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정작 4·13 총선에서 심판 당한 것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3년 동안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떠넘기며 친기업, 반노동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것의 걸림돌이 될 세월호 참사의 진실도 철저히 은폐해 왔다. 참사 이후 오히려 민영화와 규제완화처럼 더 큰 참사를 불러일으킬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이런 사악함에 대한 불만과 변화에 대한 염원 속에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고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과 무소속 노동자 후보들, 그리고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도 당선할 수 있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사명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쉽사리 공세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가 내세우는 '민생 살리기' 코드는 실상 평범한 서민들의 삶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이익을 지칭할 뿐이다.

'박근혜 심판'이라는 총선 결과를 무시하는 뻔뻔함 때문에 최근 박근혜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29퍼센트, 한국갤럽). 새누리당은 19대 임시국회에서 노동약법들은 통과시키려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에게 참사의 책임을 물었다.

버리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전교조가 발행한 《416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세월호 계기수업을 하는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로 협박하고 있다.

세월호 진실 은폐

심지어 그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때 난동을 부리고 유가족들을 비난한 우익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청와대의 사주를 받고, 전경련의 후원을 받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시국회를 제안한 국민의당이나 더

민주당도 못 미덥다. 이들은 노골적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박근혜가 경제 위기를 앞세워 친기업적 정책을 펴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항의 운동에도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뒤통수를 쳤다. 세월호 운동의 결과로 당선한 박주민 당선자는 더민주당의 우경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유가족들과 세월호 운동의 열망을 울곧게 대변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약법은 저지하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강제하려면 이들과 독립적으로 싸워야 한

다. 국회 밖에서 지난 3년간 박근혜의 발목을 잡아 온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더 커져야 한다. 그래야 박근혜와 집권 여당의 불도저식 공격에 제동을 걸고, 그들 내부의 균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총선에서 드러난 사람들의 분노와 불만은 투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이윤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 우선시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이는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확대에 반대한 노동운동의 오랜 요구들과 접맥한다.

유가족과 416연대도 메이데이 연단에 올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노동자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진실과 정의, 변화를 염원하는 학생들은 메이데이에 참가해 박근혜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하자.

함께 합시다(010-5443-2395)
2016 세계 노동절 대회
일시·장소 : 5월 1일(일) 오후 3시 대학로
주최 : 민주노총

‘민생’ 살리겠다며 ‘기업주’ 살리기에 나선 박근혜

이번 총선에서 청년과 대학생의 투표율이 13퍼센트나 증가했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청년과 대학생의 열망이 특히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역대 최고로 심각한 청년 실업,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고 유가족을 고립시키려고 했던 정부에 대한 반감 등이 큰 몫을 했을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과 형편없는 타협을 일삼아 온 더민주당의 일부와 “노동 개혁에 이견이 거의

없다”는 국민의당을 끌어들이며 ‘노동개혁’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해고는 쉽게, 비정규직은 많이, 임금은 낮게 해 기업주를 돕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노동 4법 중에서도 비정규직을 대폭 늘릴 파견법에 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우기고 있다.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도 버리고 있다. ‘규제프리존’이란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

해 규제를 일시에 철폐해 주겠다는 것인데, 세월호 참사를 낳았던 규제 완화를 줄이지는 못 할 망정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의료민영화 시도에 길을 터줄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박근혜의 패배를 바랐던 노동자·청년·대학생들은 이번 총선 결과가 보여 준 불만과 분노, 새누리당 참패로 얻은 자신감을 결집해 국회 밖의 광범한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계급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는 기업들이 이윤 경쟁을 해야만 돌아가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폭로한 참사다. 청해진해운은 이윤을 뽑아 내려 안전비용을 줄이고, 무리한 증축과 과적을 일삼았다. 이런 탓에 배의 복원력이 크게 나빠졌다. 세월호는 떠다니는 '폭탄'이었다. 국가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는 이런 과정을 순탄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지 청해진해운의 탐욕 때문만이 아니다. 이윤 경쟁 체제인 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목숨보다 이윤이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과 정부는 안전을 위한 투자를 '낭비'라고 여긴다. 사회의 우선순위가 결코 생명과 안전에 있지 않다. 가령 해경은 2011년 "사고가 연간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구조를 민영화하고 이후 계속해서 안전 관련 예산을 삭감해왔다.

세월호 참사는 이 사회에서 안전문제도 계급에 따라 불평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줬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대부분은 노동계급의 자녀이거나, 노동자들이었다. 일하느라 아이의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유가족의 이야기는 평범



자본주의에선 안전 문제는 정치적이고, 계급적일 수밖에 없다.

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자신의 일처럼 여길 수밖에 없게 한다.

부자들은 안전을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이 거의 없다. 지난해 전국민을 불안해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라"고 했지만, 아침마다 만원 지하철을 타며 출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그

런 선택권이 없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이다.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말대로 "우리 사회 모든 사건들이 노동자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손에서 이 사회의 대부분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안전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결부돼 있다. 실제로 대형 참사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안전교

육과 안전장치 등이 미비해서 벌어진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들- 인력 충원,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반대 -은 사회 전체 안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제다.

세월호 운동의 주요 요구인 '안전사회 건설'은 근본에서 사회의 우선순위가 "이윤보다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싸움이다. 이 사회의 물자와 재원을 안전에 더 투자하게 하려면 그것들을 손에 쥐고 있는 자본가 계급의 양보를 강제해야 한다. 이윤을 창출하는 노동계급은 일손을 멈춰 체제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고유의 힘을 갖고 있다. 이런 힘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서 발휘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윤을 위해 안전과 생명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의 주범들은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착취의 주범들이기도 하다. 참사 직후부터 전교조를 포함해 많은 노동자들이 유가족과 일체감을 느끼며 운동에 동참해 왔다.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이 노동계급의 투쟁과 맞물려 함께 벌어진다면 총선 패배 후유증 탈출을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심화시켜 투쟁의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이주노동자는 범죄자도 테러리스트도 아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백만 명에 이르고,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은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

열악한 노동조건, 임금 체불, 폭언, 폭행 등 부당한 처우가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만연해 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하루 11~12시간씩 장시간 일을 하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한국인에 비해 산업재해 때문에 죽거나 다치는 일이 더 많지만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도 빈번하다. 여성 이주노동자 중 10퍼센트 이상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했지만 신고도 하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장 이동

의 자유를 박탈한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도입된 이후 독소조항이 더욱 늘어 왔다.

정부는 이렇게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를 견디다 못해 비자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딱지 붙이며 탄압하고 있다. 올해 4월 초에 박근혜 정부는 한 해 평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5천 명씩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강요한 정부와 기업주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양산한 진정한 주범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며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노동자들이고, 불합리한 제도의 피

해자들이다.

야만적인 단속 추방에 피해를 입은 이주민들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얼마 전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가구 공단에서 여러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14개월 된 아이의 엄마가 단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무작위로 불심검문을 해서 최근 최근 수원 지역에서만 1백 명이 넘게 단속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주노동자 차별과 탄압을 강화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한다. 또 무슬림과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몰며 자신들의 파병 정책이 낳은 문제의 책임도 전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임금이 떨어지고, 실업이 만연한 것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지배자들의 정책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런 정부의 위선을 폭로하며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선 투쟁에 연대하자. 5월 1일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린다. 이주민 차별에 반대하는 학생들도 함께하자.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 후원해 주세요

※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 '집중이슈 - 세월호 참사에서 더 다양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wspaper.org

추천 소책자

4차 전면 개정증보판
세월호 참사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김승주·김지윤·박한솔·양효영 지음
3,500원, 138쪽

구입 문의 : 02-2271-2395, 010-5443-2395
mail@workersolidarity.org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201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일시·장소: 5월 1일 (일) 오후 1시 보신각 (집회 후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장까지 행진)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조, 외국인이주노동운동연합회,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